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신상진*

❖ 요약 ❖

이 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논의하였으며,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제시하고 주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구도 형성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노력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6자회담 구도의 제도화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

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 일, 한 등에 전달하고 다시 이들의 반응과 입장을 취합하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중재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다자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중국,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I. 서언

제2차 북핵 위기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2년여 기간동안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북핵

『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2호

*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이 글은 2004년 12월 11일 한국협상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필자는 한석희 박사를 비롯하여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세분의 익명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북핵문제는 여전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남아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후,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제공해 왔던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공해 상에서 대량살상무기 원료 선적 혐의가 있었던 북한 선박을 나포하였으며,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을 추방하였다. 9·11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핵심 국가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¹⁾ 북한이 이라크에 이어 미국의 군사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3년 8월 1차 북핵 6자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여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2차 6자회담이 2월 25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3차 6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의장성명문이 채택되었다. 2004년 9월말 이전까지 개최하기로 한 4차 6자회담이 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와 동결과 보상문제 등에 대한 북·미간 이견으로 인하여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지난 3차에 걸친 6자회담은 중국의 적극적 중재외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핵계획을 동결 또는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도 회담을 무작정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6자회담 구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시 행정부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라크전 이외의 새로운 전쟁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²⁾

1)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미국 측은 “모든 옵션”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이 발표되었다(국정홍보처, 2003, 91-95).

2) 부시는 2004년 연두교서에서 북핵문제는 이라크문제와 달리 외교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ush, 2004).

2004년 9월 이전 개최하기로 한 4차 6자회담이 북·미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열리지 못하여,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정이 위협 받고 있다. 북한이 핵을 협상카드로서만이 아니라 체제안보 수단으로도 간주하고 있고, 9·11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위험한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보유하거나 나아가 테러단체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White House, 2005), 북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라이스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거점’(outposts of tyranny)으로 묘사하고(Rice, 2005),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국정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이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도 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Bush, 2005년 3월 24일).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공개 선언하였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4차 6자회담 참가 여부를 결정하려던 북한은 부시 2기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다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을 6자회담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다시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미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대치국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미국의 북핵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6자회담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 간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1. 북핵 위기 발생 원인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시기인 1994년 미국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핵개발을 동결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게 된 이유를 미국에게 돌리고 있다. 2003년까지 2기의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 주기로 한 합의사항을 미국이 이행하지 못하였고,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김정일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등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적 조치로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05).

반면,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원료를 수출하는 한편,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프로그램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럽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직접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군사적 제재수단까지 동원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김정일 정권교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iksich, 2003, 3-5).³⁾

중국은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에서 기인한다고 보아 왔다.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변학자들은 북한이 켈리 미국 특사에게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핵 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자극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도록 하려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3) 그러나 부시 집권 2기에 들어 미국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교체 보다는 정책변환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 해결 시 국제협력과 외교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ush, 2005년 2월 4일).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보상을 받아내고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은 한·미·일간 군사동맹관계를 이완시킴으로써 안보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핵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張璉, 2004, 9; 于美華, 2003, 26-28).

중국정부와 다수의 중국의 관변 학자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 무기로서 가치가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Zhu Feng, 2004, 5; 買賣提, 2003). 2004년 4차 6자회담이 지연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는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2년 10월 북핵 위기 발생 직후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개발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칸 박사의 증언 이후 중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미국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2005년 이란 핵문제와 유럽연합의 대중 무기금수조치 해제문제 그리고 대만문제 등으로 대미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의 북핵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증폭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화하고 있다(Kahn, 2005).

중국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를 삼게 된 일차적인 목적은 9·11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최우선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羅潔, 2004, 31-32).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고,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의 명분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월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⁵⁾

4) 중국의 관변연구기관 방문 시 인터뷰, 2004년 8월 10일.

5)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세계 패권 추구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중국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于美華, 2003, 26-27; 吳言, 2001; 王鑫, 2003, 16).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국제안보 이슈로 부각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북한에게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 강화의 구실을 주지 않으려 하고,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국에 대한 적극적 외교노력을 기울여 왔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목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로 요약될 수 있다(任曉, 2005, 41).

1) 한반도 비핵화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 환경 조성을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핵심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정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1,300 킬로미터가 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과거 해양세력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데 징검다리로 활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朱廳昌, 2002, 35-36; 陳峰君, 王傳劍, 2002, 32-42).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여전히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한반도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클린턴 행정부시기 미국은 북한의 핵 의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영변지역에 대한 폭격을 고려했는데, 만약 미국이 북한 일부지역을 제한적으로 폭격하게 되더라도 1961년 중·북 군사동맹조

약에 따라 북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대한 여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⁶⁾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역내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MD체제 구축 등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영향력 강화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⁷⁾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주둔의 핵심 근거가 되어 왔으며,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일에게 MD 공동연구 개발을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역내 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도 중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재관, 2004, 37-74; 신상진, 2001, 12-15; 時殷弘, 2002, 47-51).

중·북관계가 예전과 같이 긴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중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핵탄두가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반체제 단체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Wolf, 2005).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는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려 왔던 핵 독점 지위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⁸⁾

6) 이러한 중국 내 견해는 (“刻意製造朝鮮威脅論,日本想趁機搞核彈,” 2003)에 잘 기술되어 있다. 2004년 12월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도 일본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역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방위력 증강 구실로 제시하였다. 「신방위계획대강」은 북한이 대규모 살상무기와 유도 미사일을 개발·배치·확산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지역안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日本新防衛大綱概要:中國和朝鮮列爲關注重點,” 2004).

7) 2003년 1월 10일 장쩌민 주석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NPT 탈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張臨濤, 2002)에 잘 기술되어 있다.

8) 2002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에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데 동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중국외교부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 2003년 6월 12일.

따라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2)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력수단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무력이나 압력수단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章啓月就中東和平峰會, 京津旅遊警告等問答實錄,” 2003),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에 대해 해상봉쇄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중국이 외교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즉, 대미관계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張璉瑰, 2005, 24-25). 중국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라고 보고,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게 되면 사태를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2003년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지지하였지만, 중국은 북핵문제는 이라크문제와 달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⁹⁾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핵문제를 중국의 중재 하에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9) 장치웨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여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북핵문제 관련국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www.chinanews.com.cn/n/2003-01-21/26/266020.html. 검색일: 2003년 1월 22일).

보인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은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된 후 더 강화되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이 이라크 다음으로 미국의 무력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면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伊拉克戰爭對中國的警思,” 2003, 33).

미국이 북핵문제를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중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중요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鳴濶, 2003, 52).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도록 요구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압력과 유인책을 병용하고 있다. 2003년 초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국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대북 원유 파이프라인을 3일간 폐쇄하고 첸치천(錢其琛) 부총리와 왕이(王毅) 부부장 그리고 푸잉(傅瑩) 아주국장을 당시 김정일이 묶고 있었던 북한 삼지연에 파견하여 김정일에게 다자회담 참여를 설득하였다.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결국 김정일이 미, 중과의 3자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데 중국의 압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결정적 이유는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과 정권교체 압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¹⁰⁾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주둔의 명분을 강화하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史澤華, 2003, 16).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게 안보 위협을 해소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동시행동원칙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대북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및 대북 중유·전력 지원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앓아서 수수방관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 수많은 북한주민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 2003년 9월 초 중국이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 수비 임무를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의 혼란이 중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중국이 중-북 국경지역 수비임무를 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 이유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당시 미얀마-중국 국경지대에도 인민해방군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¹¹⁾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데 외교정책의 핵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인민해방군을 배치한 목적이 북한에 군사력을 파병하려는 데 있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중국 내에는 최소한 5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유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강력사건에 탈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해소되고 국제고립이 완화되어 북한에서 정치·사회적 안

10)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를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劉建超, 2003; 孫承, 2003, 19). 원자바오 총리도 부시대통령과 회담 시에 북한의 합리적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人民日報』, 2003년 12월 10일).

11) (www.fimprc.gov.cn/chn/xwfw/fyrth/1032/t25769.htm, 2005년 2월 1일). 램튼 교수도 이라크 사태에서와 같이 북한 핵문제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ampton, 2004).

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여전히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미·일에게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남한 관계와 대일 관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2주일 전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나, 2001년 2월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당일 김정일이 베이징에서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중국이 자신의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에게 과시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미국, 남북한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한·미와의 관계를 개선·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孫云, 2004, 34).

III. 중국의 6자회담 입장과 전략

1.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이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북·미 양자대화 또는 다자틀 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¹²⁾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대화를 거부하자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3자회담과 6자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외교를 전개하였다. 2003년 4월 3자회담 이후 중국은 3자회담을 한번 더 개최하고 미국이 주장하였던 확대 다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보이다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다자틀 내 양자대화 구도를 상정하고

12) 朱鋒, “六方會談後的朝鮮核危機:問題與前景,” 『現代國際關係』, 2003年 第9期 (2003. 9), p. 10.

북한·러시아·일본이 선호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도록 하였다. 북한이 주장한 양자대화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불가능하고, 미국이 주장한 5자 대화구도는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러시아까지 포함된 6자회담이 더 유익하다고 결론을 내렸다.¹³⁾

중국은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목적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참여국들에게 책임 분담 요구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 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6자회담이 다음과 같은 합리성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첫째, 북핵문제에 대한 중, 한, 러의 입장이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회담에서 합리적·균형적인 결과도 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6자회담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을 고립시키는 구도로서만 작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3차례 개최된 6자회담에서도 1대 5의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도로 전개되지 않았고, 6개국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모양새가 유지되었다. 둘째,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과 관련된 문제로, 6자회담은 동북아의 핵심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국들의 입장과 이해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메카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6자회담을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6자회담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등 기존의 양자 안보체제를 새로운 집단안보체제에 포함시켜 기존 안보체제와 신 안보체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朱鋒, 2003, 14; 朴鍵一, 2003, 46; 任曉, 2005, 40-41; 張璉瑰, 2004년 10월 5일).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동북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실제 성과가 중요하지 북핵문제 해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회담 참여국문제에 개방적이라면 6자회담을 개최하여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1차 6자회담이 개최된지 반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2차 6자회담이 열

13) 중국은 3자회담 이후 내심으로는 일·러를 배제하고 한국만이 추가 참여하는 4자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리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국은 한국과 함께 2차 6자회담에서 상설 실무기구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여 관철시켰다.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회담 지속에 대한 희망이 증대되면서, 중국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다자안보대화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2. 6자회담 구도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 수행

2003년 4월 3자회담 개최 이후 회담 형식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북핵 대화가 4개월 동안 개최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해소시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설득노력을 전개하였다.

1차 베이징 6자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는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미국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추세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핵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북한에게 확대 다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였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2003년 7월 12일 당 대외연락부장을 역임한 파이빙귀(戴秉國) 외교부 수석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정일에게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다자회담을 조속히 수락하도록 적극 설득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힘으로써 김정일에게 확대 다자회담 참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동아일보』, 2003년 7월 16일). 아울러 파이빙귀 방문시 중국은 북한에게 디젤유 1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오

면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타이빙귀가 미국을 방문(7.18-21)하여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에게 3자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이 바라는 5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7월 25일 왕이 부부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 최수헌에게 타이빙귀 방미 결과를 공식 전달하여 북한에게 다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제시한 다자회담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주재 박의춘 대사가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통해 6자회담 개최 수용의사를 발표(7.31)하였다. 북한은 중국이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러시아를 참가시켜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자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확대 다자회담 구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왕이 부부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8.7-9)하여 6자회담 개최 시기, 의제 및 대표단 구성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중국은 당초 자신이 바랐던 회담구도는 아니었지만, 회담의 형식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당사국 설득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齊彬, 2003).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의 외교노력은 북한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모두에 대해 전개되었다.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의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7.15)와 타이빙귀 외교부 부부장의 방미 및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7.30) 등을 통해 중국은 북한문제의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북핵 폐기와 다자회담 개최 등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동시에 북·미 양자접촉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6자회담에 대한 북·미의 이견을 조정하였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북한이 다자대화에 나오면 미국은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북·미로 하여금 대화 무대로 나오도록 중재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카드를 제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미국에게 김정일정권

전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취하였는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과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한국이 중국에게 대북 설득 노력을 요청하였다면, 중국은 미국의 양자대화 입장과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이전에는 대북 안전보장 제공 불가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한국에게 강조하였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 방미 직전 왕이 부부장의 한국방문과 8월 1차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책협의회 당일(8.13-14) 리자오싱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실무진이 한·미간 북핵 협의가 이루어지기 직전 한국을 방문한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개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북핵 다자회담에 대한 일·러의 참여에 내심으로 소극적이었지만,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타이빙귀가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 푸잉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의 방일과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의 방중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외교 실무급 접촉을 통해 중국은 일본에게 북핵 다자회담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들 외교접촉 과정에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화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¹⁵⁾

이후 요리코 일본 외상의 중국방문(8.6)을 계기로 중·일은 북한의 NPT 탈퇴와 핵개발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핵 다자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다만, 중국은 일본인 납북문제는 북·일 양자간 현안이

14) 왕이 부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실무진에게 평양정권 교체 정책 이외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Tkacik, 2003).

15) 당시 북한은 일본의 다자회담 참여에 대해 반대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5자회담 수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므로 6자회담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6자회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¹⁶⁾

북핵 3자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러시아는 확대 다자회담에서도 배제되지 않기 위해 미국, 중국, 남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였다. 특히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 불찬성,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 및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입장 등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파이빙귀의 방러 시(7.2-4)에도 북핵 다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였다. 로 슈코프 외무차관 방중 시(8.11)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과 유사시 중·러가 북한에 대해 군사지원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과 북한에게 다자회담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하였다.

요컨대,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 일, 한 등에 전달하고 다시 이들의 반응과 입장을 취합하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중재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다자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또한 대내 경제발전 추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제기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역내에서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3. 6자회담의 전개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 격상

2003년 4월 중국의 중재로 3자회담이 개최된 후 확대 다자회담의 참가국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끝에 1차 6자회담이 성사됨으로써 북핵문제의 대

16)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2003년 8월 10일 일본을 방문하였던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을 통해 일본에게 공식 전달되었다.

17)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時殷弘, 2003, 32; 鳴濶, 2003, 52; Zhu Feng, 2004, 9-10; Guo Feixiong, 2004, 11-16).

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이 마련되었다. 1차 6자회담 마지막 날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6개 항의 주최국 요약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2차 6자회담은 반년만인 2004년 2월이 되어서야 열렸다.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 선언을 동시에 한 뒤에 핵사찰·핵폐기-대북 안전보장 제공·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의 입장(동시병행원칙)과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도록(CVID)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치달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6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지만, 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중국이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자대화 구도로 인식하여 6자회담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루종웨이(陸忠偉) 소장은 6자회담을 ‘상하이 5’와 비교하면서 ‘베이징 6’로까지 평가한 바 있다.¹⁸⁾

중국은 이 무렵부터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문제를 다루는 지역 다자안보 협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0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장치웨이(章啓月)는 “6자회담 형식이 준수되고,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6자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外交部發言人在記者招待會上答記者問,” 2004년 12월 5일). 일본을 제외하고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다자외교를 미국의 양자동맹 외교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간주해 온 중국은 2차 6자회담 이후 실무그룹 설치 약속 등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자, 6자회담 진전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 형성의 과

18)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의 발언, 2003년 11월 12일.

정으로 간주하였다(楊伯江, 2004, 43-44; 陳佩堯, 2004, 30-33; 任曉, 2005, 38-41). 6자회담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중국 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을 평화와 안정 유지세력으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틀을 동북아 지역안보문제를 다루는 메카니즘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대만문제와 함께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6자회담이 지속되어 북핵문제뿐 아니라 한반도의 군비통제 등 평화체제 구축과정에도 기여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중국은 6자회담에 역내 유일한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로의 발전에 찬동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북간 갈등이 6자회담을 통해 타결되더라도 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원조, 외교관계 수립, 미사일협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이들 문제들을 논의할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따라서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로의 발전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6자회담을 중국의 안보전략에 유익한 다자안보대화라 간주하고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하였다. 결국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요구를 수용하였다. 2003년 10월 30일 김정일은 우방귀와 가진 회담에서 2차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방문 요청을 수락하였다.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이 활용한 수단은 5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 경제원조 카드였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동시행동 원칙과 일괄타결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북한에 대한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중국은 닝푸쿠이(寧賦魁)를 북핵담당 대사에 임명하고, 외교부 내에 한반도판공실(朝鮮半島事務辦公室)을 설치하여 6자대화 재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1월초 타이빙귀와 왕이 부부장이 한, 일과 미국을 방문하여 우방귀의 방북결과를 전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킬 방안을 협의하였다. 11월 22일 북한 6자회담 대표 김영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12월 중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공동문서에 담을 내용까지 논의하였다. 그러나 미·일이 대북 지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북한 핵 의혹시설 사찰과 폐기를 요구하는 강경한 내용을 공동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2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과 중국 등의 외교노력은 2004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2003년 12월 18일 미국무부가 북한에 동시행동 원칙 수용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여 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2003년 12월 말 왕이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가 2004년 초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고, 북한은 남북한 장관급회담 개최일자에 맞춰 2차 6자회담을 2월 25일부터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회담 참여 발표로 6자회담이 재개되게 되었지만, 이는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지속적인 외교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원조를 약속하는 동시에 압력도 행사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지루(沈驥如)는 중-북한 군사동맹조약 폐기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沈驥如, 2003, 53-58),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었지만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¹⁹⁾

미군이 후세인을 체포한 장면을 보고 불안해 하였을 김정일이 마지막 남은 동맹국인 중국의 회담 재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차 6자회담에서 차기 회담 일정과 상설 워킹그룹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중국은 북핵 대사로 임명된 닝푸쿠이를 비롯한 외교 실무진을 동원하여 실무그룹을 개최하고 6자회담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2004년 3월 24일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김정일을 면담하고 6자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어냈다. 이후 중국은 베이징을 방문(3.

19) 2004년 8월 중국 내 저명 국제관계 학술지에 북한정권을 비판한 논문이 게재된 후 북한은 중국 측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 하에 『戰略與管理』는 곧바로 폐간조치를 당하였다. 그리고 중공 중앙 당학교 교수 장렌구이가 2005년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한 주간지 『世界知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도 폐쇄되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대내 단속 조치였다(Tkacik, 2005, 4-5).

29)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북한 측의 입장을 통보하고 실무그룹 조기 개최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디트라니 미국 한반도담당 대사와의 실무그룹을 조기 개최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6자회담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 진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은 김정일의 베이징 방문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04년 4월 19일과 20일 김정일과 후진타오 등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3억 인민폐에 이르는 중유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참여를 약속받았다(이교덕, 신상진, 2004, 7-8). 이로써 중국의 제의 하에 5월과 6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으며, 6월 23일 3차 6자회담이 성사되었다. 3차 회담에서는 각국이 북핵문제 해결 구상을 제기하였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단계 조치를 조기에 취한다는 진일보한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朱鋒, 2004, 1-7).

그런데 북한이 3차 6자회담 개최 협의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안보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로동신문』, 2004년 4월 2일), 중국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2004년 2월 중국 사회과학원 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형성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每日新聞』, 2004년 2월 25일), 이후 북한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6자회담의 지역 다자안보대화체로의 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동아시아 다자안보대화체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2005년부터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기구를 서둘러 창설할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 참여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시작된다면, 후쿠야마 교수의 제안처럼 북한이 빠진 5자로 구성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논의가 되어 중국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張鋒, 2005年 3月 18日; The Brookings Institutions, 2005).

IV. 결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실무진들이 빈번한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우방귀와 첸치천 등 중국의 지도자들이 김정일과 접촉하여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설득하였다. 북한으로 하여금 사태를 악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회담에 북한을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생존에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북한은 2002년 10월 켈리 방북 이후 북·미간 협의내용을 중국에 통보해 주었고,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할 때에도 중국에 이를 사전에 알려주었다.²⁰⁾

그러나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북한을 다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은 오랜 시일에 걸쳐 북한을 설득해야 했다. 그리고 북한은 3자회담 시에 중국대표를 따돌리고 미국대표에게 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3년 7월 다이빙귀 방미 시 중·미가 3자회담을 한 차례 더하고 이어 5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자는데 합의한 후 북한은 6자회담 개최안을 러시아에 먼저 통보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중·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 정권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행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북한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중국의 대북한 식량 제공 규모는 북한 전체 식량 도입량의 1/3 정도에 이른다.

20) 켈리 방북 시 북한이 미국에게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최진수 북경주재 북한 대사가 왕이 부부장에게 알려주었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 하루 전에 우동허 평양주재 중국대사를 북한 외무성에 불러 통보했다. 중국의 한 학자와의 인터뷰, 2004년 8월 11일.

더욱이 2002년 12월 미국이 대북 증유공급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거의 전량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다.

따라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이후 조성된 북핵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관계, 중국과 남북한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중·미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중국과 남북한관계가 긴밀해야만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시 2기 미국행정부의 김정일 정권교체를 추진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장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여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미국과 북한이 강경입장을 완화하여 북핵 대화가 진전될 경우,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로의 발전문제가 심도 있게 전개될 여지도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중·미관계 개선, 중·일 갈등 완화, 독도 문제 해결, 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 건설 등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북한이 여전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진전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한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

- 국정홍보처. 2003. 『전쟁은 잠그고 경제는 연다: 미·일·중 현장에서 본 노무현 외교』. 서울: 국정홍보처.
- 김재관. 2004.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제10권 1호.
- 문흥호. 200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기조.”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9월 23일).
- 박병광. 2004.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동아연구』 제46집.
- 신상진. 2001. “MD와 중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8월 15일).
- 이교덕, 신상진. 2004.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4-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05. 『중·평방』(2월 10일).
- 한석희. 2005.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중국정치연구회 발표문(3월 19일).

(2) 영문

- Bush, George W. 2004.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1/text/20040120-7.html> (검색일: 2004년 1월 21일).
- Bush, George W. “President Sworn-In Address to Second Ter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 (검색일: 2005년 3월 24일).
- Bush, George W.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 (검색일: 2005년 2월 4일).
- Guo Feixiong. 2004. “China’s Role and Objectiv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 Kahn, Joseph. “China Doubts U.S. Data on North Korean Nuclear Work.” <http://www.nytimes.com/2005/03/07/international/asia/07china.html> (검색일: 2005년 3월 8일).
- Lampton, David M. 2004. “China: Fed Up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June 4).

Niksch, Larry A. 2003.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Report*, IB91141 (April 28).

Rice, Condoleezza.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Designate Dr. Condoleezza Rice." <http://www.state.gov/r/pa/ei/wh/rem/40991.htm> (검색일: 2005년 1월 20일).

The Brookings Institutions. 2005. "A Regional Discussion of the Six-Party Pro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http://www.brookings.org/comm/events/20050311.pdf> (검색일: 2005년 3월 25일).

The White House. 2005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검색일: 2005년 3월 24일).

Tkacik Jr, John J. "Decision Day Looms Over North Korea." online.wsj.com/article_print/0..SB105839894625819400,00.html (검색일: 2003년 7월 18일).

Tkacik Jr, John J. 2005. "Does Beijing Approve of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Backgrounder*, No. 1832 (march 15).

Wolf Jr, Charles. "The Multilateral Path to Disarming North Korea." <http://www.rand.org/commentary/021605AWSJ.html> (검색일: 2005년 3월 28일).

Zhu Feng. 2004.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3) 중문

于美華. 2003. "對話是解決"朝核問題"的最佳途徑." 『論壇通訊』 第1期.

王鑫. 2003. "朝鮮核危機的走勢." 『瞭望』 第2期.

任曉. 2005. "六方會談與東北亞多邊安全機制的可能性." 『國際問題研究』 第1期.

朱廳昌 主編. 2002.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北京: 時事出版社.

朱鋒. 2003. "六方會談后的朝鮮核危機:問題與前景." 『現代國際關係』 第9期.

朱鋒. 2004. "第三輪朝核六方會談與美國的策略變化." 『現代國際關係』 第7期.

朴鍵一. 2003. "北京六方會談與朝鮮核問題前景." 『當代亞太』 第10期.

- 陳峰君, 王傳劍. 2002.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羅潔. 2004. “六方會談: 和平列車有待加速—訪朝鮮半島問題專家于美華.” 『世界知識』第14期.
- 張鋒. 2005. “東亞不用建新安全機制.” 『環球時報』(3月 18日).
- 張璉瑰. 2005. “2005: 朝核問題關鍵年.” 『世界知識』第2期.
- 張璉瑰. 2004. “送走切尼, 迎來金正日: 判讀朝核問題走向.” 『世界知識』第9期.
- 張璉瑰. “朝核問題六方會談被判死刑?” [http:// 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0-05/26/490990.shtml](http://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0-05/26/490990.shtml) (검색일: 2004년 10월 5일).
- 楊伯江 等. 2004. “東北亞安全機制: 現實與前景.” 『現代國際關係』第4期.
- 陳佩堯. 2004. “東北亞安全機制VS朝核問題與兩岸關係.” 『中國評論』2月號.
- 孫承. 2003.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第3期.
- 孫云. 2004. “3.20后美國臺海政策新動向.” 『中國外交』第11期.
- “溫家寶總理與美國總統布什會談, 布什: 反對台獨.” 『人民日報』(2003年 12月 10日).
- 史澤華. 2003. “朝鮮核危機的走勢.” 『瞭望』第2期.
- 沈驥如. 2003.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弈.” 『世界經濟與政治』第9期.
- 時殷弘. 2002. “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與中國的對策.” 『中國外交』第7期.
- 時殷弘. 2003. “朝核危機六方會談與中國外交.” 『中國評論』10月號.
- “伊拉克戰爭對中國的警思.” 『中國評論』5月號.
- 鳴澗. 2003. “推動朝核問題和平解決技巧高超.” 『瞭望』第44期.
- 賣買提. “朝鮮的真實目的和中國國家利益最大化的選擇.” <http://www.qglt.com/wsrmlt/wyzs/2003/01/12/011210.html> (검색일: 2003년 1월 15일).
- 吳言. “鞏固美國的世界霸主地位—美國要在朝鮮半島開倒車.” <http://www.peopledaily.com.cn/GB/guojj/20010403/431716.html> (검색일: 2001년 4월 3일).
- “刻意製造朝鮮威脅論, 日本想趁機搞核彈.” [http:// www.cnradio.com/home/picture/200301220291.html](http://www.cnradio.com/home/picture/200301220291.html) (검색일: 2003년 1월 23일).
- “日本新防衛大綱概要: 中國和朝鮮列爲關注重點.” [http:// 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2-10/26/515502.shtml](http://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2-10/26/515502.shtml) (검색일: 2004년 12월 10일).

張臨濤. “朝鮮核武影向中美關係.” [http:// www.zaobao.com/special/korea/pages/korea231002.html](http://www.zaobao.com/special/korea/pages/korea231002.html) (검색일: 2002년 12월 20일).

“章啓月就中東和平峰會, 京津旅遊警告等問答實錄.” [http:// www.chinanews.com.cn/n/2003-06-03/26/310071.html](http://www.chinanews.com.cn/n/2003-06-03/26/310071.html) (검색일: 2003년 6월 4일).

<http://www.chinanews.com.cn/n/2003-01-21/26/266020.html> (검색일: 2003년 1월 22일).

劉建超. “朝核問題六方會談籌備工作正在緊張進行.” [http:// www.chinanews.com.cn/n/2003-12-02/26/376212.html](http://www.chinanews.com.cn/n/2003-12-02/26/376212.html) (검색일: 2003년 12월 3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1032/t25769.htm> (2005년 2월 1일).

齊彬. “中國在朝核問題上加力.” [http:// www.chinanews.com.cn/n/2003-07-15/26/324585.html](http://www.chinanews.com.cn/n/2003-07-15/26/324585.html) (검색일: 2003년 7월 19일).

“外交部發言人在記者招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1032/t28982.htm> (검색일: 2004년 12월 5일).